

“한 해 2천4백 명 산재사망, 노동자 시민 힘으로 끝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출범 ... “법 제도 제·개정, 정권 규탄 투쟁 전개”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문재인 정권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즉각 중단하라.”

청와대 앞에서 분노와 규탄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와 김용균 재단(준)

등이 10월 7일 11시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약칭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문재인 정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등 법 제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에서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근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한 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2천4백여 명에 이른다”라며 “1975년 현대중공업에서 창사 이후 매해 열 명 이상의 노동자가 중대 재해 등으로 사망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특히 하청 비율이 늘고 원청이 책임을 외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고 위험이 몰리고 있다”라며 “기업이 법 제도가 규정한 기본 의무만 지켰어도 이렇게 많은 이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근태 지부장은 “오늘 대책위



출범을 시작으로 한국사회에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겠다”라고 선포했다.

9월 20일과 26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에서 중대재해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9월 27일 서산 한화토탈 추락사고, 다음날인 28일 부산 오페리하우스 크레인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죽었다. 금속노조는 연이어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위 출범과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자고 정당, 노동인권단체 등에 제안했다. 26개 단위가 대책위에 참가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부가 노동자 안전대책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와 2018년 김용균 노동자 사고 당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하청노동자 죽음의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도급”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아직 관련 법 제도 제정과 개정을 위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노동삼권 박탈에 속도를 내면

서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법 제도 마련에 관심이 없는 듯하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약속해왔다. 대통령 후보자 시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산재사고에 기업 책임을 높이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자 생명안전제도’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송명주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기업 보호에만 열 올리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명주 부위원장은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사망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지 않으면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자”라며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번 투쟁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여 사업계획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10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16일 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라는 이름으로 시민문화제를 열고, 2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 집중대회를 진행한다. 대책위는 29일 현장 노동자 국회 증언대회,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선 촉구’ 서명운동 등을 이어나간다.

미조직기금 확대, 기업지부 해소 부칙 개정안 대의원대회 상정

노조 131차 중앙위, 임·단협 불·미승인사업장과 규약·규칙 개정안 등 처리 ... 성원 부족으로 산회

금속노조가 10월 7일 131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일반 예산의 50%를 미조직기금으로 사용하는 안과 기업지부 해소에 관한 규약 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14일, 49차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노동법 개악 저지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특별결의 건도 임대에 상정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조합원이 늘고 있지만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산업구조가 바뀌는 정세에 맞춰 더욱 능동적으로 전략 조직화 사업을 펼치기 위해 일반예산 이월금 중 미조직기금 적립 비율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38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미조직기금을 설치하고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 일반예산 다음 회기 이월액 중 20%를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했다. 적립한 미조직기금은 서울과 인천, 대전충북, 부산지역 공단과 전기·전자(경기), 철강(광주전남, 포항), 조선(경남) 산업부문 전략조직화사업에 투입했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산별 완성 대의원대회에서 한시로 기업지부를 인정하기로 한 이후 2007년부터 2년마다 여섯 차례에 걸쳐 기업지부 해소를 유예해온 노조 규약부칙 14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중앙위원들은 ▲기업지부 해소 산별교섭 정상화할 때까지 유예 ▲조합은 산별교섭 정상화를 위



한 단계 계획 ▲기업지부 금속산별운동 강화 복무방안 ▲지역지부 강화를 위한 중·단기 전략을 노조 11기 대의원대회에서 수립한다는 규약부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노조 중앙위원회는 ▲2019년 임·단협 불승인·미승인사업장 처리 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해소 건 ▲조직편제 방안과 함께 규정·규칙 아홉 개를 개정했다.

중앙위는 기금운용 규정을 개정해 전면 파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생계비(실업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장기투쟁 대책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노조 사무처를 징계할 경우 사무처 처무 규정(30조 징계)을 적용해 징계하고, 해당 사무처의 조합원 지위에 관해 징계할 때 노조 상벌 규정(8조 징계, 9조 징계종류)에 따르도록 명확히 정리했다. 정직과 감봉의 경우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상벌 규정 9조 징계종류에서 ‘정권’ 처분을 받았을 때 조합원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오해나 오용되지 않도록 했다.

노조 채용직 간부가 지역지부 임원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임기가 종료돼 노조 필요에 의해 재채용할 경우 이전 근무 기간과 임원 복무 기간을 승계해 금속 수당을 지급하기로 임금 경조사비 지급 규칙도 개정했다.

선거 관리 규정도 개정했다 조합·지부·지회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후보등록개시일로부터 이전 10년 정권 이상의 징계 처분 경력’을 조합경력소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일은 40일 전 공고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해 선거운동기간을 20일로 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지부 규정과 선거 관리 규정, 회의 규정 등에서 문구를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이번 중앙위는 지부 조직편제 개편도 의결했다. 기업지부인 쌍용자동차 지부는 11기 선거를 지회 선거로 치르고 경기지부로 편제한다. 만도지부는 지회 편제 방안을 마련해 11기 1년 차 중앙위에서 결정한다.

노조 중앙위원회는 여섯 번째 안건을 심의하던 중 성원 부족으로 ▲산별 기금 배분 비율 변경에 관한 건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건 ▲산별 부대비용 사용 승인 건 ▲조합비납부 유예 사업장 승인 건 ▲조합비정액 납부 사업장 승인 건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산회했다.